

비상경제장관회의 **경제부총리** 모두발언(3.8)

-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지난해 고용시장은 취업자 증가(81.6만명)와 실업률(2.9%)이 2000년 이후 각각 최고 및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, 고용률(62.1%)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일상회복 과정에서 이례적 호조세를 보였습니다.

- 올해도 고용률과 실업률*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,

* '22→'23년^e: [고용률(15세 이상)] 62.1→62.0% [실업률] 2.9→3.2%

- 취업자 증가는 지난해에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큰 폭으로 확대된 +82만명에서 올해 +10만명 내외로 상당폭 둔화되어, 전체 취업자수는 장기추세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
- 이는 ①작년 고용호조*에 따른 통계적 기저효과, ②고령화(전체 고용률: 62.1%, 60세이상: 44.5%) 등 인구구조 변화**와 함께 ③경기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기인합니다.

* 코로나 이전('10~'19년) 평균적 취업자 증가폭(+34.3만명)을 +47.3만명 상회

** 한은('23.3월) : 인구구조 변화 등 고려한 '23~'27년 취업자 증가를 +7~12만명 전망

- 이러한 취업자 증가폭의 축소와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체감되는 고용둔화는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입니다.

- 기 편성된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고용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고, 당장 시급한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-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,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도 적기에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

[❶ 일자리 사업 신속집행 계획 점검]

☐ 먼저, 일자리 사업 신속집행 점검입니다.

☐ 정부는 경기·고용둔화 여건을 감안하여 올해 일자리 예산 (14.9조원*)의 70%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.

* 전체 일자리 예산 30.3조원 중 구직급여 등 집행시기가 정해진 의무지출 사업 제외

○ 특히,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작년보다 1만 4천명을 확대하여 금년 총 104.4만명을 채용할 예정으로,

- 연초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월말까지 작년보다 높은 수준인 82.8만명 채용을 완료하였고,

* 직접일자리 집행실적(만명): ('22.1월) 65.9 (2월) 82.0 / ('23.1월) 66.4 (2월) 82.8

- 1분기에 92.4만명 이상 채용(전체 계획인원의 88.6%)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
[❷ 빈일자리 해소 방안]

☐ 다음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입니다.

☐ 최근 고용둔화 우려에도 산업현장에는 빈일자리가 증가*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

* 미충원인원(반기별, 만명, 1인이상): ('21.3분기)13.5 ('22.3분기)18.5

☐ 이에 정부는 인력난 호소가 큰 제조업, 물류·운송 등 6대 업종*을 선정하여 각각 주무부처 책임관을 지정하고,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확대와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하여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고자 합니다.

* 제조업(조선, 뿌리), 물류·운송, 보건·복지, 음식업, 농업, 해외건설

❶ 조선업은 용접·도장 등 생산인력 양성('23년 2,000명), 미래인재 양성센터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,

- 5천명 수준 조선업 외국인력 쿼터 한시적 신설, 원하청 협업을 통한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인력을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.

- ② 보건복지업은 5년 이상 근무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경력개발경로를 다양화하고,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상향하는 등 업무강도를 완화하여 인력유입을 지원하겠습니다.
- ③ 물류업은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을 확대하여 근로자 업무부담을 경감하고, 금년부터 방문동포(H-2)의 취업이 허용된 상하차 업무에 더해 분류작업에 대해서도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.
- ④ 농업의 경우 도시 유희인력이 농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도농 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초광역 단위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,
 - 금년중 청년농 4천명을 선발하여 창업 준비부터 농지공급과 자금지원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.

[③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]

- ☐ 다음으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- ☐ 최근 조선업은 선박 수주가 크게 증가되었으나, 하청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2023년말 기준으로 1.4만명의 생산인력 부족이 전망됩니다.
 - 이에 지난 2월 27일, 조선업 원·하청 기업과 정부·지자체는 조선업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- ☐ 정부는 동 협약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부지원 사업을 패키지로 마련하여 조선업 원·하청의 성실한 협약 이행을 전제로 인력부족과 경영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.

- ① 우선, 조선업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신규입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대폭 확대*하고, 하청업체 재직근로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(2년만기 총800만원)**을 신설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.

* 연령제한(45세) 폐지, 대상지역 확대(울산·거제 등 → 군산·부산) ⇒ '23년 2천명 목표

** 상생협약 각 주체별 출연 → 재직자 임금 연300만원 확대 효과 기대

- 하청 근로자의 복지재원으로 활용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*은 3년간 2배 수준으로 확대되도록 재정지원을 강화**하는 등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 해소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.

* 원하청·지자체·정부 공동 출연 → 근로자 학자금, 주택대출, 건강검진 등 복지지원

** 현재 조선업 193억원 수준 조성·운영 중 → 연간 170억원 수준 추가 조성 목표

- ② 또한,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*과 재취업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채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, 광역단위 취업허브 구축을 통해 일자리 매칭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.

* 하청이 35~39세 신규채용, 최저임금 120%이상 지급 → 채용장려금 월100만원씩 1년간 지급

- ③ 아울러, 당장 시급한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고용·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,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업장에 한하여 고용보험사업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고용부 장관님께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.

(고용부 장관 모두발언)

□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